

북한의 변화와 연대·협력의 필요성

김연철 |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모든 것은 변한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변화와 불변이 공존하기 때문에, 변화는 그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 김정은 시대에는 ‘수령제의 유지’라는 지속성과 ‘정치의 제도화’라는 차이가 공존한다. 김정일 시대의 특징인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는 막을 내렸고, 군에 대한 당의 우위가 제도화되었다. 정례적으로 당대회가 열리고 당의 조직과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경제 분야에서 분권과 시장화의 경향도 자리를 잡았다. 부족의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일상생활의 계층화라는 또 다른 변화도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보건 위기가 과연 북한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김정은 체제 들어 소비재 부문의 시장화는 ‘비공식적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 소비생활이 다양해지고 소득의 불균형과 계층의 분화도 이루어졌다. 식생활 분야의 변화도 뚜렷하다.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구매력의 상승과 정보의 확산이 식생활을 안정시켰다. 주택의 보급도 사회계층의 격차를 반영하며, 주민들의 ‘내 집 꾸미기’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소비생활의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일상생활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장기적인 보건 위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24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외부로 향하는

모든 교통편을 차단했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에 환자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차단과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족이 심화하면 국가는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부족은 이미 보건 위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2017년 북한이 핵무장 선언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4개나 연이어 채택되었다. 그 이전의 제재가 군수품과 대량 살상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17년 이후 제재의 목표는 북한의 포괄적인 경제력 약화였다. 2018년부터 북한의 수출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 북한은 무역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외 수지, 즉 관광 개방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모든 관광이 중단되고 관광 인프라 건설도 '임시 휴업' 중이다.

보건 위기는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킬 것이다. 무역은 교통 차단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고, 농업과 어업을 비롯한 생산 부문의 경제활동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원자재의 부족은 유통의 시장화를 제한할 것이다. 국가 부문에 우선으로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재 부문의 생산과 유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부족의 장기화는 분권과 시장화의 긍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이다. 방역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정치 사상적인 측면에서 통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경제 영역에서는 분권의 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부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계획'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북한에서 소비재 시장은 공급 부족과 계획 능력의 제한으로 자체적으로 진화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보건 위기 국면에서 식생활과 주택을 포함하는 소비생활의 시장화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변화의 방향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보건 위기는 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보건 위기 국면에서 백신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부국과 빈국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물론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다시 협력과 보편적 인도주의의 가치가 살아나고 있으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회복하려면 연대와 협력은 필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혹은 모든 국가의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많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보건

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중요해졌으며, 좀 더 과감하고 유연한 위기 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보건 위기는 북한의 취약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북한은 경제와 보건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이 좀 더 자신 있게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취한 차단과 봉쇄는 전염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백신 도입이다. 북한은 백신 지원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처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지 않으면,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코로나19의 종식에도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남북 방역 협력도 중요하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한반도 정세의 장기 교착 국면에서 남북 보건 협력을 ‘비본질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본질적 사안’의 진전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북한의 입장처럼, 본질이 풀려야 비본질적 사안도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진전하기 어렵다. 북핵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 역시 미·중 전략 경쟁의 무대가 될 것이며, 지정학적 비극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나 협상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며,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의 선후가 아니라 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 비무장지대의 야생 멧돼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전염의 남하를 막기 어렵다. 과거 말라리아의 발병이나 산림병해충 사례처럼, 남북한의 접경이 이어져 있어 동식물의 이동을 철조망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북한의 인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공동 방역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성을 강조하고, 8차 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의 비중을 줄이고 단계적 통일론을 분명히 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면 남북관계의 원심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남북이 이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정학적 비극을 지정학적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